

##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 규명

양동안\*

- 
- |                   |                        |
|-------------------|------------------------|
| I. 머리말            | V. 미·소공동책임론의 오류        |
| II. 분단과 원인의 의미    | VI. 결론: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 |
| III. 복합론(複合論)의 오류 | <참고문헌>                 |
| IV. 미국책임론의 오류     | <국문요약>                 |
- 

### I. 머리말

이 논문은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원인’이란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한 하나 혹은 소수의 결정적인 요인을 뜻한다. 한 인간이 사망했을 때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는 반드시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 있게 마련이며, 그 결정적인 원인이 곧 사망의 정확한 원인이고, 그 정확한 사인(死因)은 하나이거나 소수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마치 법의학자가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해부하여 사자(死者)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아내는 것처럼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한반도를 분단으로 이르게 한 결정적 요인)을 찾아내려고 한다.

이제까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밝히는 많은 논저들이 발표되었지만,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판정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분단의 정확한 원인으로 판

---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치학 전공(dongahny@aks.ac.kr).

정하기에는 부적절한 것들이었다. 어떤 논저들은 한반도의 분단 원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열거했는데, 분단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열거하는 것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것과 같다. 어떤 논저들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으로 한두 가지 요인을 지적했으나, 그 지적한 요인이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었다.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자는 먼저 ‘분단’과 ‘원인’의 정확한 의미를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까지 발표된 논저들에 의해 한반도 분단 원인으로 판정되었던 것들이 실제로 분단의 정확한 원인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필자의 ‘사인(死因)판정’을 제시하려 한다.

## II. 분단과 원인의 의미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분단’과 ‘원인’에 대한 타당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개념정의가 없으면, 분단이 아닌 현상을 분단이라고 설정해놓고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발표된 한반도의 분단 혹은 분단국문제를 다룬 논저들 가운데는 ‘분단 국가’의 개념정의를 제시한 논저들은 상당히 많지만, ‘분단’의 개념정의를 제시한 논저들은 희소하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분단국가의 개념정의로부터 분단의 개념정의를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거나 분단을 정밀하게 정의할 필요 없는 간단한 현상으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왕에 발표된 분단국 관련 논저들에서 필자가 발견한 분단의 개념정의는 차기 벽의 분단에 관한 개념정의가 유일하다. 그나마도 분단의 개념정의에 대해 진지하게 논급하면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저서의 각주에서 분단의 정의를 가볍게 소개했다. 그는 “분단(division)이란 뚜렷한 인종적 동질성, 공통된 역사전통, 그리고 오랜 정치적 통일성을 유지해온 경험을 가진 민족국가가 인위적으로 외부의 압력에 의해 두 개 이상의 정치 단위로 갈라진 경우를 일컫는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분단국가란 2차대전 후의 특수한 정치현상이며 특히 한국과 독일의 경우가 분단 국가의 가장 전형적 사례이다”라고 서술했다.<sup>1)</sup>

차기벽의 분단에 관한 개념정의는 국가내부의 원인에서 비롯된 분단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결함이 있다. 국가의 분단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내부의 원인에 의해서도 초래될 수 있다. 차기벽의 분단에 관한 개념정의는 내부원인에 의한 분단을 배제한 것이라든지, 사용하는 용어 등에 비추어볼 때 헨더슨(Gregory Henderson) 등의 분단국가 개념정의로부터 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헨더슨 등은 세계의 분단국문제를 다루는 저서에서 분단국가(divided nation)와 분립국가(partitioned country)를 별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그들에 따르면, “분단국가들(divided nations)은 뚜렷한 인종적 동질성, 공통된 역사적 전통, 성공적인 정치적 통일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상태 직후에 두 개의 정치 단위로 나누어진 국가들이다. 분단은 외부로부터 강요된(imposed) 것이라는 의미에서 인위적인 것이며, 분단을 강요한 외부란 통상 전쟁 종료 시의 강대국이다. … 분립국가들(partitioned countries)은 동일한 정치 단위에서 거주하고 있던 집단들 사이에서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갈등 때문에 야기된 내부적 원인들로부터 결과 된 분단국들이다. 이런 분단들은 대개 식민주의 제국의 붕괴와 연관된다.”<sup>2)</sup> 헨더슨 등은 분단국과 분립국에 관한 위의 개념정의와 더불어 분단국의 사례로 독일, 한국, 중국, 베트남을 적시했고, 분립국의 사례로는 오스트로-헝거리제국의 붕괴로 나뉘어진 8개국, 영국령 인도의 붕괴로 나뉘어진 5개국,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붕괴로 나뉘어진 4개국, 팔레스타인 위임통치의 종료로 나뉘어진 2개국을 적시했다. 이처럼 분단국과 분립국을 구분하게 되면, 분단(division)을 개념 정의함에 있어서도 분립(partition)을 배제하게 될 것이다. 헨더슨 등은 국가의 분단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외부원인에 의한 분단과 내부원인에 의한 분단으로 유형분류하면 될 것을 분단과 분립을 별개의 범주로 설정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유도한 것이다.

필자는 분단의 유형을 외인에 의한 분단(국제형 분단), 내인에 의한 분단(내쟁형 분단), 내·외인이 복합하여 초래한 분단(복합형 분단)으로 분류한 학자들의 견해<sup>3)</sup>

1) 차기벽, 『민족주의원론』(한길사, 1990), 373쪽의 각주 38.

2) Henderson, Gregory, Richard N. Lebow and John G. Stoessinger, *Divided Nations in a Divided World*(New York: David McKay Company, Inc., 1974), p. 434.

3)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박영사, 1989), 6쪽; 이완범, 「한반도 분단의 성격: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 분단」, 김계동(등), 『한국현대사의 재조명』(명인문화사, 2007), 27~28쪽.

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분단의 개념정의가 타당해지려면 이들 3가지 분단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분단에 대한 차기벽의 정의를 포괄성과 정밀성이 높아지도록 보완한다면, ‘분단이란 하나의 영토 위에서 장기간 단일의 통치체에 의해 통치되어 온 정치단위가 내·외적 요인들의 작용으로 인해 토착민들의 복수의 주권적 정치단위로 분열되어 영토를 분할 지배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정의는 분단되기 이전의 통치체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토착민의 주권적 통치체가 아닐 수도 있으며(바꿔 말하자면, 식민지 통치 기구일 수도 있으며), 분단의 원인이 내인, 외인, 내외인 복합 중 어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분단을 이렇게 정의했을 경우, 분단 현상의 핵심사항은 토착민에 의한 복수의 주권적 정치단위 구성과 그들에 의한 영토의 분할 지배이다.

이러한 분단의 개념정의를 한반도의 분단에 적용하면, 한반도의 분단은 한반도라는 영토 위에서 장기간 단일한 통치체에 의해 통치되던 정치단위가 두 개의 주권적 정치단위로 분열되고 그들이 한반도를 분할 지배하게 된 것을 뜻한다.

이제 분단의 원인에 있어서 ‘원인’의 의미를 정밀하게 정리해보자. 원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어떤 요인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원인으로 되려면, 우선 그 요인이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시간적으로 앞서 발생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사물이나 현상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이고 우선적인 작용을 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결과에 대해 충분조건이 되면서, 동시에 우선적으로 작용한 요인을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과를 초래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이고 우선적인 작용을 하는 요인만이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의학에서의 사인(死因)판정에 관한 이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법의학에서는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판정할 때 사망자의 시체 속에서 하나의 장애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 장애가 필연적으로 인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작용(치명적인 작용)을 하는 장애인지 여부를 분석하여 그 장애가 필연적으로 인체를 사망에 이르도록 작용하는 장애일 경우 그 장애를 사망원인으로 판정한다. 만약 시체 속에 인체를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치명적인 작용을 하는 장애와 치명적이지 않은 장애가 복수로 존재하거나, 치명적인 작용을 하는 복수의 장애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 가운데 우선적 장애를 사망원인으로 판정한다. 우선적 장애란 필연적으로 사망을 초래하는 생명유지장기(뇌, 심장, 폐)에 있어서의 장애와 시간적

으로 먼저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생명유지장기에서의 장애와 생명유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의 장애가 다 같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명유지장기의 장애를 우선적 장애로 인정하며, 복수의 생명유지장기에서 장애가 존재할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장애를 우선적 장애로 인정한다. 단, 뇌 심장 폐에 동시에 총상을 당한 것과 같이 복수의 생명유지장기에 나타나는 장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 모두를 사인의 연립으로 판정한다. 끝으로, 시체 속에서 발견되는 복수의 장애 중 어느 하나도 치명적인 장애가 아니지만 그들의 작용이 결합하여 인체의 사망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그들 모두를 합동사인으로 판정한다.<sup>4)</sup>

한편, 어떤 사물과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유사원인(類似原因)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원인이란 얼핏 보기에는 원인처럼 보이나 실제로 있어서는 결과에 대해 필연적이고 우선적인 작용을 하지 않은 요인들을 말한다. 유사원인으로는 열후요인(劣後要因), 촉진요인, 기제(mechanism), 증상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열후요인이란 우선요인에 대한 반대어로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우선요인과 함께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 결과를 초래하는데 필연적이고 우선적인 작용을 하지 않은 요인을 말한다. 촉진요인이란 결과를 초래하는데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을 말한다. 기제는 원인이 작용하여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뜻한다. 증상은 어떤 원인으로 초래된 결과의 양상을 뜻한다.

이들 유사원인들도 법의학의 사인판정이론을 원용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열후요인은 법의학의 사인판정에 있어서 우선적 장애로 판정되지 않은 장애에 해당된다(우선적 장애는 우선요인에 해당한다). 촉진요인은 인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작용을 하는 장애가 복수로 존재 할 때 사망을 초래하는 치명적 작용은 하지 않으면서도 치명적 장애가 인체의 사망을 초래하는 것을 보조하는 작용을 하는 사망 촉진인자에 해당된다. 기제는 어떤 사람이 복부에 심한 자창(刺創)을 당하여 과다출혈 끝에 사망했을 경우 그 과다출혈에 해당된다. 그 경우 그의 사망원인은 복부자창이다. 심각한 복부자창은 필연적으로 과다출혈과 사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과다출혈은 복부자창이라는 원인이 인체를 사망케 하

---

4) 윤중진, 『법의학』(고려의학, 2006), 6~8쪽.

는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 복부자창이라는 원인을 사망이라는 결과로 연결시키는 기제인 것이다. 증상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장애로 인해 호흡이 정지되고 심장박동이 정지되어 사망이 확실해졌을 경우, 그 호흡정지나 심장정지에 해당한다. 호흡정지나 심장정지는 사망의 보편적 증상(또는 사망이 완결된 증상)일 뿐 결코 사망의 원인이 아니다. 사망의 원인은 호흡정지나 심장정지를 필연적으로 초래한 장애이다.<sup>5)</sup>

이상에서 정리한 ‘분단’과 ‘원인’의 정확한 의미를 토대로 한반도의 분단 원인을 정리해보면,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라는 한반도라는 영토 위에서 장기간 단일한 통치체에 의해 통치되던 정치단위가 두 개의 주권적 정치단위로 분열되고 그들이 한반도를 분할 지배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는데 필연적·우선적 작용을 했던 요인(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의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필자는 다음 절에서부터 이제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한반도 분단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이 실제로 ‘분단의 원인’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한다. 한반도 분단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여러 가지 설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그 설들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 원인에 관한 설들의 분류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우리 민족 내부의 요인이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설을 내인론(內因論)으로, 우리 민족 외부의 요인 즉 국제적 요인이 분단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설을 외인론(外因論)으로, 내인과 외인이 복합작용하여 분단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설을 복합론(複合論)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외인론과 복합론에서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한 외인을 지적함에 있어서 미국의 정책 혹은 조치(들)가 분단을 초래했다(또는 분단을 초래하는데 결정적 작용을 했다)고 주장하는 설을 미국책임론으로, 소련의 정책 혹은 조치(들)가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했다(또는 분단을 초래하는데 결정적 작용을 했다)고 주장하는 설을 소련책임론으로, 미국과 소련의 정책 혹은 조치(들)가 공동으로 작용하여 분단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설을 미·소공동책임론으로 분류하고 있다.

---

5) 열후요인, 촉진요인, 기전, 증상 등에 관한 법의학적 설명은 이윤성, 『법의학의 세계』(살림, 2003), 31~32쪽과 윤중진, 앞의 책, 7~8쪽 참조.

### III. 복합론(複合論)의 오류

한반도 분단의 원인 규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주장되고 있는 설은 복합론이다. 복합론은 ①내인과 외인의 비중을 거의 동등하게 보는 복합론, ②외인의 우세를 인정하는 복합론, ③내인의 우세를 인정하는 복합론 등 세 개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①의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 학자로는 강만길, 정영훈 등을 들 수 있고, ②의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 학자로는 김학준, 이완범 등을 들 수 있다. ③나 순수한 내인론을 주장하는 학자는 없다.

내인과 외인을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보는 복합론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역사인식의 주체적 자세’를 이유로 내인의 비중을 무겁게 산정한다. 강만길은 민족분단의 주된 원인을 미소양군의 분할점령 즉 외인에서 구하는 것은 타율적이고 비주체적인 역사인식이라고 비판했으며,<sup>6)</sup> 정영훈은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민족내부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족사를 인식하는 주체적 자세라고 말했다.<sup>7)</sup>

그들은 한반도 분단의 내적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열거했다. ①식민지 시대의 독립운동과정에서 나타난 사상적 대립 및 그 연장선에서 나타난 민족 내부의 사상적 대립, ②건국준비위원회, 좌우합작운동, 남북협상 등 일련의 좌우합작 명분을 내세운 운동의 실패, ③반탁세력의 투쟁으로 인한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④외세의 분할점령에 편승하여 분단국가를 만들어서라도 정권을 잡으려 한 일부 정치세력의 획책과 그에 휩쓸린 민중의 어리석음, ⑤국제정세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실주의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방해한 감상적 민족주의 및 과별주의의 정치문화, ⑥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저해한 왕조시대 아래의 한민족 사회 내부의 사회적 모순과 계급갈등 등이다.<sup>8)</sup>

이상과 같은 내적 원인들이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하는데 있어서 외인과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외세에게만 돌리지 말고 우리 민족도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민족주의

6) 강만길, 『한국민족운동사론』(한길사, 1985), 87쪽.

7) 정영훈, 「한반도 분단의 민족내적 원인」, 『정신문화연구』, 21권 2호(1998), 132쪽.

8) 강만길, 앞의 책, 87~88, 104~105, 107쪽; 윤진현, 『한반도분단사의 재조명』(문우사), 1993), 238, 240, 249쪽; 박태균, 『한국전쟁』(책과 함께, 2005), 99쪽; 정영훈, 앞의 논문, 141, 146, 152쪽.

적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검시’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들이 열거한 한반도 분단의 내인들이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이고 우선적인 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째, 식민지 시대 및 해방 후 우리 민족 내부에서 전개된 사상적 갈등은 한반도 분단의 초래에 필연적이며 우선적인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

20세기의 세계사를 통 털어 볼 때, 하나의 국민(혹은 민족) 내부에서 발생한 사상적 갈등-대립이 국가의 분단을 초래하는데 필연적이며 우선적인 작용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러시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사상투쟁이 전개되었으나 국토가 분단되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사상 갈등으로 인해 국가가 분단되었지만 그것은 장개석 정권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간섭이라는 외부의 요인 때문에 초래된 것이지 중국 내부의 사상갈등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 아니다. 중국은 내전을 통해 통일적으로 공산화되고 있었는데 미국이 개입하여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보호함으로써 분단된 것이다. 국민 내부의 사상적 갈등-대립이 아무리 심각해도 그것은 국가를 분단시키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우 보다 심각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 내부의 사상갈등이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하는데 필연적이며 우선적인 작용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릇된 견해이다.

한편,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 내부의 사상대립은 외세의 한반도 분할점령 이후 외세의 영향으로 인해 심화된 것이다. 해방 전에는 민족 내부의 사상대립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으며, 해방직후에도 좌우익이 다같이 신탁통치 반대 입장을 천명할 정도로 덜 심각했다. 우리 민족 내부의 사상대립은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 후, 우리 민족 내부에 자기의 추종세력을 부식하려는 외세의 공작으로 인해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 특히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협정 발표 후 소련이 한반도의 좌익으로 하여금 종전의 반탁입장을 찬탁입장으로 변경하도록 공작<sup>9)</sup>한 후 우리 민족 내부의 사상대립은 격렬해졌다. 이처럼 우리 민족 내부의 사상대립심화는 순수하게 민족 내부에서 형성된 현상이 아니라 외세의 작용에 의해 초래된 것이므로

---

9) 소련이 남북한의 좌익세력에게 찬탁입장을 취하도록 지시한 자세한 경위는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일보사, 1992), 188~192쪽 참조

그것을 순수한 민족 내부의 요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둘째, 건국준비위원회, 좌우합작운동, 남북협상 등 일련의 좌우합작 명분을 내세운 운동들의 실패가 한반도 분단의 초래에 필연적·우선적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좌우합작 명분을 내세운 그러한 노력들의 실패가 한반도 분단을 초래하는데 필연적이며 우선적인 작용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건준, 좌우합작운동, 남북협상의 실상을 정확히 알지 못한데서 비롯된 그릇된 주장이다.

건준은 좌우익세력이 진지하게 협의하여 구성한 진정한 의미의 좌우합작적 민족통일전선기구가 아니다. 그것은 여운형과 공산주의자들이 좌익의 헤게모니 장악을 보장할 수 있는 구도로 자의적으로 조직한 다음 통일전선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중도파와 우익을 끌어들이려 한 기구였다. 건준 중앙기구의 간부명단에 들어 있는 우익인사들의 이름은 모두 당사자의 사전 허락도 받지 않고 도용한 것이다. 건준은 진정으로 좌우합작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외양만 민족통일전선기구처럼 만들고 우익과 중도파를 좌익의 뜻대로 조종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우익진영이나 중도파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러한 기구에 참여할 리 없다. 그래서 우익은 건준에 불참했고, 처음에 건준에 참여했던 중도파도 2주 만에 탈퇴했다.<sup>10)</sup> 건준은 진정한 의미의 좌우합작 추구 기구가 아니며, 따라서 그러한 건준이 지속적으로 활동했다 해서 좌우합작이 이루어진다거나 분단이 방지될 가능성은 없었다.

좌우합작운동도 그 명칭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좌우합작을 추구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었다. 1946년 봄부터 가을까지 남한에서 전개되었던 좌우합작운동은 그 출발부터가 진정한 좌우합작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것은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이승만과 김구를 남한정계에서 축출하고 미국의 군정과 신탁통치계획에 협조할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미국이 주선하고 배후 조종하여 등장하게 된 것이다.<sup>11)</sup> 서울에서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한 미군정의 실무요원은 레오나드 베치(Leonard Berch) 중위였다. 미군정은 베치 중위를 통해 좌우합작운동에 나설 사람들의 회합을 주선했고, 좌우합작위원회에 많은 자금을 지원했으며,

10) 건준의 구성 및 성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동안, 「「건준」과 「인공」의 결성 및 해체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제3집(1993), 283~296쪽 참조.

11)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46, Vol. VIII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pp. 645~646, 698~699 참조.

미군정 사령관 하지는 좌우합작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좌우합작운동을 공개적으로 성원했다.<sup>12)</sup> 좌우합작운동의 제1주역인 김규식은 이승만과 미군정의 권유에 따라 좌우합작운동에 파동적으로 참여했으며,<sup>13)</sup> 좌우합작운동의 제2주역인 여운형은 남한에서 우익진영의 핵심을 배제한 좌우합작을 성사시키고, 그러한 남한의 좌우합작과 북한의 좌익정권간의 합작을 통한 좌의 지배적 통일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했다.<sup>14)</sup> 이러한 성격을 가진 좌우합작운동이 남한의 좌익과 우익을 진정으로 합작시킬 가능성은 거의 전무했다. 게다가 소련군과 북한공산당은 남한의 좌우합작운동이 미군정의 지원·조종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간파한 다음에는 남한의 공산당과 여운형에게 좌우합작에 반대하도록 지시했을 정도이므로,<sup>15)</sup> 남한의 좌우합작운동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한반도 분단이 방지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남북협상도 곁으로는 한반도의 분단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인 것처럼 선전되었지만, 그 내막을 보면 참여세력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목적은 남한에서의 정부수립을 저지하는 것뿐이었다. 한반도의 분단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협상이라면 당연히 남북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인정받는 주도적 정치세력들이 참여해야 할 것인데 1948년의 남북협상에는 남한의 주도적 정치세력이 배제된 채, 북한의 좌익정권 담당세력과 남한의 좌익세력 및 남한에서의 선거실시에 반대하는 중도파와 감상적 민족주의세력들만 참여했다. 협상에 참여하는 세력들의 궁극 목적도 상이했다. 남한의 중도파와 감상적 민족주의세력은 남북한의 분단방지를 추구하기 위해 남북협상을 추진했지만, 남북협상을 주도한 북한의 좌익정권 담당세력과 남한의 좌익세력은 남한에서의 선거실시와 정부수립을 저지하고 북한에서 실행된 바와 같은 사회주의 지향적 사회변혁을 남한에서도 실시(간단히 말해서, 공산화통일의 실현)하는데 남한의 중도파와 감상적 민족주의세력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남북협상을 추진했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협상은 남한의 중도

12) 송남현, 『해방3년사』II(가치, 1985), 367, 369, 389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설 한민족문화연구소(편),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선인, 2001), 99쪽.

13) 이정식, 『김규식의 생애』(신구문화사, 1974), 140~141쪽.

14) 양동안, 「여운형의 민족통일노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신문화연구』, 27권 4호(2004), 168~169쪽.

15) 중앙일보 현대사연구팀, 『발굴자료로 쓴 한국현대사』(중앙일보사, 1996), 245~246, 259~260쪽 참조.

파와 감상적 민족주의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것이나, 그것을 주도한 남북한의 좌익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것이었다.<sup>16)</sup> 남북협상은 남한의 우익세력이 배제된 것이었으므로 애당초 한반도의 분단을 방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되지 못했다. 더구나 당시 북한에서 단독정권수립과 사회주의화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척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사 남북협상에 남한 우익진영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한반도 분단이 저지될 수는 없었다.

셋째, 남한 내의 반탁운동세력 때문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것이 분단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나, 외세의 분할점령에 편승하여 분단국가를 만들어서라도 정권을 잡으려는 일부 정치세력과 그에 동조한 민중의 어리석음이 분단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은 당시 전개되었던 실제상황과 부합하지 않은 주장들이다.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이 한반도 분단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은 그에 앞서 발생했던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한반도 분단의 완결로 연결되는 과정의 한 사건에 불과하다(이에 관해서는 VI장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반탁운동세력 때문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남한의 반탁운동세력의 활동은 한반도 분단의 내인이 될 수 없다.

게다가,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의 책임은 남한의 반탁운동세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남한 반탁운동세력의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자세가 비실용적인 것도 분명하고,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의 책임이 부분적으로 그들에게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의 주된 책임은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고집한 소련에 있다.<sup>17)</sup> 소련은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남한 내 우익세력을 통일임시정부 구성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고집함으로써 미·소공동위원회를 결렬시켰던 것이다.

소련이 반탁을 주장하는 남한 우익세력을 통일 임시정부 구성에서 배제할 것을

16) 1948년 남북협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동안, 「1948년 남북협상의 허와 실」, 『한국사 시민강좌』, 38집(2006), 143~165쪽 참조.

17) Lankov, Andrei, "The Soviet Politburo Decisions and Emergence of the North Korean State, 1946-1948,"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From Division Toward Peaceful Unification*(The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Politics, 13-15 July 2005), pp. 66~71, 78~78 참조.

주장함에 있어서 내세운 논거는 신탁통치에 반대한 세력은 곧 모스크바협정에 반대하는 세력이며, 통일 임시정부의 구성은 모스크바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스크바협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그 구성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련의 논거는 모스크바협정의 한 부분인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것을 모스크바협정 전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소련의 입장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비추어보거나 통일 임시정부 구성의 근본 목적이 한반도의 통일적 독립을 원만히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도 타당하지 않다. 또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을 통일 임시정부에 참여시켰다 하더라도 반탁세력이 참여한 통일 임시정부와 신탁통치 시행국들이 협의하게 되면 절충점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소련의 입장은 불합리한 것이다.

해방정국의 남북한에서 외세의 분할점령에 편승하여 분단국가를 만들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들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활동이 한반도 분단에 필연적이고 우선적인 작용을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외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외세가 한반도를 분단하려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행동도 분단지향적일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와 활동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넷째, 감상적 민족주의 및 파벌주의 정치문화나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모순과 계급갈등은 근대화되지 못한 제3세계의 거의 모든 민족사회 및 민족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이며, 그러한 요소들이 존재한 민족사회나 민족국가들 가운데 국가분단을 경험한 경우는 극소수이므로, 우리 민족 사회 내부에 존재했던 그러한 요소들을 한반도 분단 초래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분단의 내인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지적한 한반도 분단의 내적 원인은 모두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들이 지적한 사항들 가운데 일부는 한반도 분단의 촉진요인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촉진요인은 원인이 아니다.

한편, 한반도의 분단 원인과 관련하여 외인우세 복합론을 취하는 학자들은 내인의 비중을 약하게 평가하면서도 그것들이 분단의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김학준은 한반도의 분단의 유형을 국제형 요소가 우세한 복합형 분단으로 보면서, 독립운동시기의 이념적 분열이 한반도 분단의 내적 원인이 되었다

고 말했다.<sup>18)</sup> 이완범도 한반도의 분단을 미·소의 분할점령이라는 국제적 요인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작용을 한 복합형 분단으로 분류하면서도 한반도 분단에 있어서 내인의 작용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내인도 분단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sup>19)</sup>

이들 외인우세 복합론자들의 견해는 한반도 분단에 있어서 내인이 외인에 비해 부차적이었다고 보는 점에서는 실상에 보다 근접하고 있지만,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아닌 것들(내부적 요인들)을 분단의 원인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는 내인과 외인을 동등한 비중으로 보는 복합론자들과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판정함에 있어서 복합론이 타당하려면 내인과 외인들이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하는 원인으로서 연립관계에 있거나 합동원인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한반도 분단의 내인으로 지적되는 사항들 가운데 어느 것도 분단의 초래에 필연적이며 우선적인 작용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논문의 VI절에서 기술하게 되는 것처럼 한반도의 분단에 필연적이며 우선적인 작용을 한 ‘치명적인’ 외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립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그것들을 합동원인에 포함시킬 수도 없다.

한반도의 분단 원인에 관한 복합론은, 내인의 비중을 높게 평하거나 낮게 평가 하나를 막론하고, 당시 한반도 내부와 외부에 존재했던 거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한반도 분단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법의학에서 사망자의 사인을 판정함에 있어서 시체에서 발견되는 모든 장애들을 사망의 원인으로 판정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 IV. 미국책임론의 오류

한반도의 분단 원인에 관해 복합론이나 외인론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한반도 분단의 외부 원인은 해방전후 시기에 한반도와 관련하여 미국이 취한 정책 혹은 조치(들)이다.

미국책임론의 가장 극단적인 부류는 한반도 분단의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18) 김학준, 앞의 책, 6, 8~9쪽.

19) 이완범, 앞의 논문, 28~29, 34~35쪽.

견해이다.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사들은 북한학자들이다. 북한학자 김한길은 미국이 ‘38도선을 고안하여 조선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이 38선을 획정한 데 이어 한반도를 세계제패의 전략적 요충으로 만들려는 계산 하에 남한에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취하면서 남한의 자주적 지방자치기관(인민위원회)을 강제해산하고, 민주-애국세력을 탄압하고, 친일파 등 반동분자들을 식민통치의 정치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되었다고 주장했다.<sup>20)</sup> 북한학자 김희일은 아세아에서 패망한 일본제국주의를 대신하여 새로운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 한반도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황급하게 38선을 획정하여 ‘우리 민족에게 국토량단의 비극을 조작한 장본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sup>21)</sup>

이러한 북한학자들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것이다. 미국의 외교문서들이 공개됨에 따라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2차대전 종전 무렵에 일본을 대신하여 아시아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야망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남한을 미국의 세계제패를 위한 요충으로 만들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 38선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고안한 것이 아니며, 미국은 남한 주민의 진정한 자치기관을 해산하거나 민주-애국세력을 탄압하거나 친일파를 식민통치의 기반으로 삼지 않았다.

미국은 아시아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생각보다는 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심했으며, 남한을 자기들의 전략적 요충이나 식민지로 만들려 하기 보다는 전략적 가치가 희박한 남한에서 미군을 가능한 한 조속히 철수하고 남한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내려 했다. 38선은 이미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입한 조건에서 미·소가 묵시적으로 양해해온 한반도 분할점령을 균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국이 서둘러 제안하고 소련이 그에 동의하여 설정된 것이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고안한 것이 아니다. 또한 미국이 인공과 각급 인민위원회를 강제해산시킨 것은 그것들이 아무런 국민의 대표성도 없이 제멋대로 정부를 참칭하고 지방자치기관 행세를 하기 때문이었으며, 미군정 기간 동안 미군이 탄압한 사람들은 좌익세력 중에서도 법률을 위반한 좌익세력이지 선량한 민주-애국세력들이 아니었다. 또한 미국은 미군정이 좌우합작운동을 주선

20) 김한길, 『현대조선력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212~215쪽.

21) 김희일, 『미제 식민지통치하의 남조선이 걸어온 예속과 몰락의 30년』(평양: 조국통일사, 1976), 6~8쪽.

하고 적극 지원한데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친일파와는 반대되는 사람들을 통치 기반으로 삼으려 했을지언정 친일파를 통치기반으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한반도 분단의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견해를 주장하는 남한의 대표적 학자는 강정구이다. 강정구는 미국이 38선을 획정한 탓으로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분단되었고, 한국인의 자주적 결정에 맡겨두었으면 한반도 전체가 사회주의의 길을 가게 되었을 터인데 미국이 남한에서 ‘일제 식민지통치의 또 다른 연속’을 추구하여 남한 주민의 자주적 사회주의화를 저지하는 바람에 한반도가 사회적으로 분단 되었으며, 미국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남북한이 단일한 사회주의제도를 채택했을 것인데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남북한에 별도의 국가가 수립되는 정치적 분단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sup>22)</sup> 강정구는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북한에서 1946년 2월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사회주의 지향적인 반제 반봉건민주혁명이 추진된 것은 소련의 개입 없이 북한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실천한 것이며, 소련은 북한에서 그러한 자주적 통치와 자주적 개혁을 허용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에 책임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sup>23)</sup>

강정구의 이러한 주장들은 자료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되거나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데서 비롯된 그릇된 것들이다. 우선 해방 후 한국인의 자주적 결정에 맡겨두었으면 한반도 전체가 사회주의의 길을 가게 되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그가 그런 전제를 하게 되는 근거는 1946년 8월 미군정청 여론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떤 사상에 찬성하는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14%가 자본주의, 70%가 사회주의, 7%가 공산주의, 8%가 모른다를 선택했다. 강정구는 이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해방공간의 한국사회는 사회주의 지향적인 좌파이념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자주적 결정에 맡겨두었으면, 북한에서 전개된 바와 같은 반제반봉건민주개혁→사회주의화가 한반도 전체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sup>24)</sup>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강정구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우선 여론조사 설문에 들어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 그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유

22)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역사비평사, 1996), 191, 199~200쪽.

23) 위의 책, 197, 199~200쪽.

24) 위의 책, 193, 197, 199쪽.

사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해 대안적 관계를 가진 사회주의이다. 따라서 그 설문에서의 사회주의는 소련공산당이 말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폐비안 사회주거나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당시의 정치지형에서는 좌익이 아닌 중도파의 이데올로기였다. 다음으로 여론조사결과에서 공산주의 지지 응답이 자본주의지지 응답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사실을 외면한 것이 잘 못이다. 끝으로 한국인의 사상대립의 주요 대치선을 ‘자본주의 vs 사회주의+공산주의’로 설정한 것이 잘 못이다. 이러한 오류들을 시정하면서 그 여론조사결과를 해석하면, ‘당시 한국인들의 압도적 다수는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중에서는 자본주의를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었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해방 후 처음부터 외세간섭이 일절 없이 한반도의 운명을 한국인의 자주적 결정에 맡겼더라면, 한반도 전체에서 북한에서 전개된 바와 같은 일이 전개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오스트리아에서와 같이 사회주의지지 세력과 자본주의지지 세력이 연합하여 공산주주의지지 세력을 제압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인의 자주적 결정에 맡겨두었으면 소련식 사회주의 통일이 가능했을 것인데 미국이 남한에서의 사회주의를 저지하는 바람에 한반도가 분단되었다는 강정구의 주장은 타당성을 상실한다.

1946년 2월 북한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된 것이나, 임시인민위 수립 이후 시행된 북한의 ‘민주개혁’(사회주의 지향 변혁)이 모두 북한 주민이 자주적으로 실천한 것이라는 강정구의 주장은 당시의 실제상황과 부합하지 않은 것이다. 임시인민위원회 설립 및 ‘민주개혁’은 철저히 소련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북한주둔 소련군 사령부는 이미 1945년 9월 14일 발표한 ‘인민정부 수립요강’에서 노동자 농민 정권 수립, 토지개혁실시, 친일분자 및 불순분자 숙청 등을 제시했다.<sup>25)</sup> 북한주둔 소련군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주둔 소련군사정부를 조직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주둔 소련군 사령부 안에 민정국을 조직해놓고 그 민정국을 통해 북조선공산당을 지휘·조종했으며, 북한주민들을 무력으로 강압하여 북조선공산당의 통제를 받도록 만들었다. 임시인민위의 수립과 ‘민주개혁’은 이러한 기제를 통해서 실행된 것이다.

---

25) 민주주의민족전선(편), 『조선해방연보』(문우인서관, 1946), 118~119쪽.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2월 4일 한반도 통일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이 끝난 직후인 2월 8일에 소련군의 지휘 조종에 의해 북조선공산당의 다수 간부들조차 모르는 가운데 갑자기 수립된 것이다. 북한의 공식문건들은 선전적 이유에서 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준비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만, 소련의 자료와 조선공산당의 자료는 임시인민위원회가 소련군 지휘부와 그 지시를 받는 극소수의 한국인들에 의해 급속하게 추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소련의 자료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조직을 결의한 1946년 2월 7일~9일의 ‘북조선 각 정당·사회단체, 행정국 및 각 도·시·군인민대표 확대협의회’를 위해 북한주둔 소련군이 치밀한 준비와 진행지원을 했음을 전해주고 있다. 소련군 사령부 민정국은 회의에 참석할 지방대표들의 수송, 숙박, 식사 준비는 물론 회의장입장, 회의진행, 회의경비까지 관장했다.<sup>26)</sup>

임시인민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공식적인 사전 논의는 각도 인민위원회에서는 물론, 북조선공산당의 공식의결기구에서도 없었다. 조선공산당의 자료는 임시인민위원회 설립문제가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에서조차 사전토의 되지 않고 사후에야 토의·결정되었음을 확인해주며, 서울의 조선공산당 중앙지도부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조직이 발표된 14일 후에야 그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음을 확인해준다.<sup>27)</sup>

‘민주개혁,’ 그중에서도 핵심사업인 토지개혁은 소련군의 지령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소련군은 모스크바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46년 1월 2일 북조선공산당에게 토지개혁을 위한 토지조사사업을 지령했다.<sup>28)</sup> 이러한 소련군의 의지에 따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민주개혁’의 제1의적 사업으로 토지개혁을 추진했다.<sup>29)</sup>

이처럼 북한에서 전개된 일들이 북한주민들의 자주적 의지와 역량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련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소련은 북한에서

26) 「정당, 사회단체, 도—군인민위원회 협의회 자료」(1946. 2. 16), 국방성문서보관소, 민정국 문서 철, 목록 106546, 문서철 7, 72~75쪽, 국사편찬위원회, 『제정당, 사회단체, 지방인민위원회 대표 자회의 자료』(수집번호: 0103014)<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선인, 2005), 153~154쪽에서 재인용>.

27)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서동만, 앞의 책, 156~158쪽 참조.

28) “북조선주둔 소련군사령관의 명령서” 제2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조선공산당 문건자료집(1945~46)』(한림대학교 출판부, 1993), 75쪽.

29)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논문의 VI장에 서술되어 있다.

자주적인 통치와 자주적인 개혁을 허용했기 때문에 한반도 분단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강정구의 주장은 타당성을 상실한다.

미국책임론의 덜 극단적인 부류는 미국이 어떤 조치만 취하지 않았으면 한반도의 분단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그런 견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견해를 피력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조순승과 전득주이다. 쿠밍스(Bruce Cumings)도 그에 동조하는 학자이다.<sup>30)</sup>

조순승은 미국이 만일 미군의 서울 진주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정부, 즉 조선인민공화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더라면 한국의 독립과 통일은 초기 단계에서 성취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한국의 통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최상의 기회였다고 주장했다.<sup>31)</sup> 조순승은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밀받침하는 논거로 인공이 이승만을 주석으로 하고 여운형을 부주석으로 하는 등 모든 경향의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고, 이미 사실상의 정부로서 기능하고 있었으며, 미국이 인공을 부인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취한 후부터 한국 정치지도자들 간에 의견불일치가 발생하고 좌우익 정당이 결성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sup>32)</sup>

전득주는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이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을 공식적인 정부형태로 승인했는데 반해 미국이 남한에서 현존하는 연립정부인 여운형의 인공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가 분단되었다고 주장했다.<sup>33)</sup> 전득주는 자신의 그러한 견해를 밀받침하기 위해 인공 내에는 이승만과 김구를 포함한 저명한 우익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sup>34)</sup> 북한점령 소련군 사령부는 이미 1945년 8월 25일 경에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의 집행위원회에게 조선총독부의 행정권을 인수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조선인민공화국을 승인했고 소련의 북한지배는 모든 수준에서 여운형 등이 수립한 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를 승인하고 이용함으로써 수행되었으

30) Bruce Cumings는 이런 견해를 명료하게 피력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저서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는 이런 견해와 동일한 논조를 담고 있다.

31) Cho, Soon Sung,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 An Evalua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67), pp. 72~73.

32) *Ibid.*, pp. 69~71.

33) 전득주, 『세계의 분단사례 비교연구』(푸른길, 2004), 62~63, 116~118, 267쪽.

34) 위의 책, 117쪽.

며, 북조선의 인민위원회는 9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했고, 북조선은 여운형의 인공이 전국의 행정권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여 북한지역에서 5도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했는데 반해 남한점령 미군은 미군사정부를 수립하고 여운형의 인공이나 김구의 임시정부를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sup>35)</sup>는 등의 말을 첨가했다. 조순승과 전득주의 이러한 주장들은 인공에 대한 기초적 사실을 모르는데서 비롯되는 잘못된 것들이다.

조순승과 전득주가 인공을 모든 사상경향의 지도자들이 다 참여한 연립정부이고 미군의 진주 전에 사실상 정부로서 기능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은 참여와 명의 도용을 구분할 줄 모르고 정부의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한 탓에 범한 오류이다. 인공의 간부명단에 들어 있는 우익진영 및 중도파 인사들의 이름은 모두가 인공 선포 주도세력에 의해 명의가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다. 인공 선포 주도세력은 그들과 인공에 관해 사전 협의한 바도 없고 그들에게 인공 간부로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한 일도 없었다. 인공의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인 여운형 조차도 그 명단의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을 정도였다.<sup>36)</sup> 우익진영 및 중도파의 인사들이 인공에 참여했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그들이 인공 선포나 인공 간부진 선정문제를 놓고 사전에 협의를 받았다는지 자기들의 이름이 인공 간부진 명단에 포함되는 것을 동의라도 했어야 한다.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을 놓고 그들이 인공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주장이다.

또 어떤 조직이 제멋대로 정부를 참칭한다 해서 그 조직이 곧 정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조직이 정부가 되려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를 조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광범한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인공은 그런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조직이었다. 인공은 조선공산당의 박현영파 간부들과 그들이 동원한 경인지역의 철도노동자와 공장노동자들 및 기타 좌익인사들이 ‘국내외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민대표들’을 자칭하면서 밤중에 회합을 갖고 일방적으로 정부를 참칭한 조직일 뿐이었으며,<sup>37)</sup> 서울에서는 처음부터

35) 위의 책, 64~65쪽.

36) 인공의 간부명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동안, 『대한민국건국사. 해방3년의 정치사』(현음사, 2001), 69~71쪽 참조.

37) 이영근, 「통일일보 회장 고 이영근 회고록(하)」, 『월간 조선』, 1990년 9월호, 432쪽; 박갑동, 『박현영: 그 일대기를 통한 현대사의 재조명』(인간사, 1983), 102쪽.

우익세력과 일반 시민의 경멸을 받았다. 인공은 이처럼 정부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 서울에서는 행정기관의 기능을 전혀 담당하지 못했다. 다만 공공권력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농촌지역에서만 지방 인민위원회가 건준의 관행을 이어받아 지방자치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했을 뿐이다.

미국이 인공을 부인하는 태도를 분명히 취한 후부터 한국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의견불일치가 생기고 좌우익정당들이 결성되기 시작했다는 조순승의 주장은 당시의 정치상황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결여한 그릇된 주장이다. 미군정이 인공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한 것은 1945년 10월 10일 아놀드 군정장관의 성명에서이고, 한국의 좌우익 정치세력들이 경쟁적으로 정당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해방직후부터이다. 우익진영의 정당만 하더라도 고려민주당은 1945년 8월 20일에 창당되었고, 조선민족당은 8월 28일에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했으며, 한국국민당은 9월 1일에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들 3개 우익정당들이 우익진영 통합정당인 한국민주당을 창당한 것은 9월 16일이다. 미군정이 인공부인 태도를 분명히 취하자 한국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의견불일치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인공 선포 이전부터 좌우익진영은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우익진영은 좌익진영의 인공선포를 전적으로 무시했었다.

소련군이 1945년 8월 25일 경에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 집행위원회에게 조선총독부의 행정권을 인수하라고 명령했다거나, 소련군의 북한지배는 모든 수준에서 여운형 등이 수립한 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를 승인하고 이용함으로써 수행되었다고 하는 전득주의 주장은 인공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결여한 잘못된 것이다. 여운형의 인공은 1945년 9월 6일에 선포되었으며 인공에는 집행위원회라는 기구가 없었는데, 인공이 선포되기도 전인 8월 25일 경에 소련군이 존재하지도 않은 인공집행위원회에게 총독부의 행정권을 인수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내렸다는 것인지 참으로 기이하다. 게다가 소련군이나 북조선공산당은 여운형의 인공을 결코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의 인공이 북한지역의 인민위원회에 대한 인공의 통치권을 요구하자 소련군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sup>38)</sup>

38)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나남출판, 2003), 90쪽과 107쪽. 커밍스도 소련군이 인공을 승인한 것처럼 잘못 기술했다.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81), p.

북조선의 인민위원회가 1945년 9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인공선포를 위한 전국 인민대표자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거나, 북조선은 여운형의 인공이 전국의 행정권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여 북한지역에서 5도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했다는 전득주의 주장도 완전한 허구이다. 9월 6일의 인공 선포 회의에는 북조선 인민 위원회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고, 북한에는 5도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한 일이 없었다.

한편, 전득주는 인공불승인 이외에도 미국의 다른 조치들이 한반도 분단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문제를 유엔에 이관시킨 것이나,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토의할 때 남북한의 대표를 유엔 토의에 초청하자는 소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한반도 분단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sup>39)</sup>

전득주의 이런 주장은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데서 비롯된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전술한 바대로, 소련은 북한지역에서는 단독정권을 수립하여 북한사회 의 사회주의화를 크게 진전시켜놓고,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한반도 통일 임시정부 구성에 남한의 우익세력을 전면 배제할 것을 고집하면서 타협을 일절 거부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이 소련의 주장을 수용하면 한반도 전체가 조만간 공산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면적 공산화를 방지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적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벗기 위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한반도문제를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닌 다자간 회의 및 국제기구로 이관시키는 것이었다.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한 미국의 조치가 한반도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유엔총회가 결의한 대로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이 실시되었더라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에 의해 입증된다.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에 한국민족의 대표들을 초청하자는 소련의 제안을 미국이 거부한 일도 없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의 그런 제의를 수용하면서, 유엔 토의에 참석할 한국민족의 진정한 대표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선거를 통해 진정한 한국민족의 대표들을 선출하여 그들을 유엔토의에 참석시키자고 수정제의했다.<sup>40)</sup> 미국의 그러한 제의를 소련이 수용했더라면 유엔토의에

293.

39) 전득주, 앞의 책, 117~118, 267쪽.

40) Cho, Soon Sung, *op. cit.*, pp. 177~178 참조.

한국민족 대표가 참여했을 것이다.

## V. 미·소공동책임론의 오류

미·소공동책임론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자는 서술의 편의상 그것을 미국치중 미·소공동책임론, 소련치중 미·소공동책임론, 엄정 미·소공동책임론 등 3개 범주로 나누어 검토하려 한다. 미국치중 미·소공동책임론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제공했지만, 미국의 정책과 조치(들)가 소련의 그것들보다 더 선행했거나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소련치중 미·소공동책임론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제공했지만 소련의 정책과 조치(들)가 미국의 그것들보다 더 선행했거나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필자는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글을 이제까지 접해본 적이 없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견해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엄정 미·소공동책임론은 한반도 분단에 대해 미국과 소련이 미친 영향이 동등하다는 견해이다.

미국치중 미·소공동책임론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김학준, 김계동, 이완범 등을 들 수 있다.

김학준은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소련군이 곧 군사점령하게 될 것으로 오판하여 우선 그 절반이라도 건져야겠다는 생각에서 38도선의 획정을 제안한 것이며, 따라서 38도선에서의 한반도 분단은 미국정부의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며, 북위 38도선에서 한반도를 분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이라고 말했다.<sup>41)</sup> 그에 따르면, 한반도의 분단은 1차적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한 국제형 분단이며 그 책임은 미국과 소련에게 함께 있지만 38도선을 획정한 것이 미국이므로 미국의 책임이 소련의 책임보다 크다는 것이다. 김계동은 미국이 소련의 한반도 전체 점령을 봉쇄하고 미국의 영향권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한반도를 분단시켰으며, 한반도를 분단시킨 후 모든 민족적 정치세력을 불법화하면서 미군사정부를 수립하였고, 한국정부 없이 신탁통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고 주장했다.<sup>42)</sup> 이완범은 38선을 경계

41) 김학준, 앞의 책, 16, 22쪽.

42)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56, 58,

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동의한 소련과 38선 분할 이후 분열을 노정했던 한국 정치세력들에도 분단의 부분적 책임이 있으므로 분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에게만 전가할 수 없으나, 미국이 38선을 경계로 미·소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것을 계획·주도하여 한반도 분단의 단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반도 분단의 중요한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sup>43)</sup>

미국치중 미·소공동책임론자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는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군사적 분할 점령과 분단을 동의어로 간주하려는 잠재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분할 점령’이라는 용어와 ‘분단’이라는 용어를 호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분할 점령과 분단을 동의어로 간주하는 잠재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잠재적 경향으로 인해 분할 점령의 경계선으로 38선이 설정된 것을 한반도 분단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 한반도 분단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소련의 책임보다 무겁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사적 분할 점령과 분단은 질적으로 판이한 현상이며, 군사적 분할 점령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분단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군사적 분할 점령이 국가의 분단을 초래하지 않은 사례는 적지 않다. 2차대전 종전시기 군사적으로 분할 점령 당했던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3개국 중 오스트리아는 분단되지 않았다. 독일에서도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 이외의 지역, 즉 서독지역은 미·영·불 3개국이 분할 점령했지만 3개 국가로 분단되지 않았다. 또 1980년 대 이래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 분할 점령했던 분쟁국가들(레바논, 보스니아, 동티모르 등) 가운데 그러한 분할 점령으로 국가가 분단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군사적 분할 점령이 분단으로 연결되기까지에는 분할 점령의 경계선이 주민들의 생활분단선 및 통치분단선으로 전환되고 그런 상태에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별도의 토착민 정권이 수립되는 중간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중간과정이 개재되지 않는 한 군사적 분할 점령은 국가의 분단은 초래하지 않는다. 군사적 분할 점령과 분단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미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분할 점령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반도 분단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소련의 책임보다 무겁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63쪽.

43) 이완범, 『삼팔선 확정의 진실』(지식산업사, 2001), 301쪽.

둘째, 군사적 분할 점령의 경계선인 38선 설정이 분단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 가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과대평가로 인해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분할 점령을 선도하고 그 경계선으로 북위 38도선을 획정한 것을 분단의 단초를 만든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래서 강만길 같은 학자는 민족분단의 구체적 계기가 38도선의 획정에 있었다고 주장하게 된다.<sup>44)</sup>

미국과 소련은 2차 대전 기간 중의 접촉과정의 어느 시기(아마도 포츠담회담의 실무접촉과정)부터 한반도에 대한 양국의 공동작전 내지 분할 점령을 묵시적으로 양해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 국가에서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거나 분할 점령을 실시하려면 불가피하게 군사활동 분계선이 필요하다. 미국이 분할 점령 분계선으로 38선을 획정하여 소련에 제의하고 소련이 그에 동의한 것은 그러한 묵시적 양해와 군사분계선 설정의 불가피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8선이 이처럼 군사활동의 분계선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그 선은 장차 한반도 분단이라는 정치적 결과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 아니었다. 38선은 단순히 군사활동 분계선이었으므로 미·소 양국 군대가 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오로지 양국 군대의 군사활동에서만 그 선을 준수하고 한국인들의 평상적 활동에서는 그 경계선이 어떤 작용도 하지 못하도록 했더라면 그 선이 분단을 초래하는 작용을 했을 리 없다.

셋째, 미국이 애초부터 한반도를 분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반도에 대한 미·소의 분할 점령 및 38선 설정을 계획한 것처럼 오해한다는 점이다.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려는 미국의 아이디어는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 공동신탁통치실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 공동신탁통치의 목적은 한반도를 통일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강대국 사이의 공동영향권 혹은 중립지대로 만드는 것이었다. 미국의 관리들은 한반도에 대한 분할 점령 계획과 군사분계선 획정계획을 연구함에 있어서 분할 점령이 분단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었다.<sup>45)</sup> 또한 미국은 한반도의 분할 점

44) 강만길,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1985), 167쪽.

45) 그러한 미국 관리들의 생각이 내포된 정책연구문서의 한 예로 “T. D. Roberts, Memorandum for Lincoln: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in the Post-Defeat Period”(15 July 1945)(미국국립문서보관소 문서 RG 165, ABC 387 Japan, Sec. 4A, Box 506)를 들 수 있다. 이 문서는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경우 장차 한국인들의 통일 중앙정부(central indigenous government)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반도의 분할 점령을 실시하더라도 점령통치는 하나의 중

령기간을 1년 정도로 매우 짧게 상정하고 있었는데<sup>46)</sup> 미국이 이처럼 분할 점령 기간을 짧게 상정했다는 것은 한반도를 분단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어느 민족의 영토를 분단하려면 많은 정치공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령 기간을 짧게 잡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 논문의 VI장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남한을 점령한 후에도 38선이 분단을 초래하는 국경선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련과의 협상을 거듭 시도했고, 한반도의 통일상태를 유지하면서 신탁통치를 실시하기 위해 한 때는 사상적 지향이 미국과 동일한 우익진영을 멀리하고 중도파를 육성하여 그들과 협력하려고까지 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부차적 비상대책으로 한반도 분단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분할 점령을 계획하고 38선을 획정함에 있어서 당초부터 한반도 분단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엄정 미·소 공동책임론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신용하를 들 수 있다.

신용하는 미국과 소련이 일본의 항복에 즈음하여 포츠담회담에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 점령하기로 밀약했다고 주장했다.<sup>47)</sup>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과 소련은 군사적 편의를 위해 한반도 38도선 분할과 남북분단을 밀약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서로 전체를 지배하려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나누어서 점령하기로 했으며, 38도선 획정은 비록 미국 ‘전략정책단’이 기안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미국과 소련의 최고 수뇌부가 정책적으로 기획하고 명령한 것이었으므로 한반도 분단에 대한 미·소의 책임은 똑 같다는 것이다.<sup>48)</sup>

신용하의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단 점령하기로 밀약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과 소련이 포츠담회담이나 기타 어떤 정상회담 및 실무회담에서 한반도

양정부에 의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6) *FRUS 1945*, Vol. VI, p. 1068.

47) 신용하, 「열강의 한국 남북분단 및 신탁통치 정책과 백범 김구의 노선(1943~45)」, 백범김구선생 기념사업협회, 『광복직후의 건국운동과 백범 김구』(백범기념관 개관 2주년기념 학술회의 보문집)(2004), 18쪽.

48) 위의 논문, 28~29쪽.

를 전리품으로 나누어갖기 위해 분단 점령을 밀약했다고 추론할 만한 단서는 아직 까지 누구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밀약이 있었다면 미국이 한반도 분할 점령에 관한 정책연구를 다양하게 전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일본의 항복 직전에 미국 관리들이 서둘러서 38선을 확정하고, 또 38선을 소련이 수용하지 않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밀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밀약을 근거로 한반도 분단에 대한 미·소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한 신용하의 견해도 타당성을 상실한다.

## VI. 결론: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

한반도 분단 원인에 관한 기존의 여러 가지 설들을 검토한 결과, 검토대상이 된 기존의 설들이 분단의 원인이 아닌 것들을 분단의 원인으로 판정하는 오류를 범했음이 판명되었다. III장부터 V장까지의 서술 내용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 민족 내부의 다양한 문제점들은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하는 데 필연적·우선적인 작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미국의 정책이나 조치들도 한반도 분단의 초래에 필연적·우선적 작용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하는데, 바꾸어 말해서 한반도에서 한국인이 구성하는 복수의 주권적 정치단위가 출현되도록 하고 그들이 한반도를 분할 지배하도록 하는데 필연적·우선적 작용을 한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가?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1945년과 46년에 한반도에서 소련이 취한 조치들 가운데 한반도 분단의 초래에 필연적·우선적 작용을 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미·소의 분할점령을 위해 설정된 미군과 소련군간의 군사활동 경계선인 38선을 봉쇄하여 생활분단선-통치분단선-유사국경선으로 만들면서 북한지역에 분리통치를 실시한 조치와 북한의 단독정권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그것을 앞장세워서 북한을 사회주의사회로 이행하는 지역으로 변혁시킨 조치이다.

먼저 소련군이 38선을 봉쇄하고 북한지역에 분리통치를 실시한 실태와 그것이 분단에 필연적·우선적인 작용을 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자.

소련군은 1945년 8월 9일부터 한반도의 북부로 진격하기 시작하여 일본이 항복

을 선언한 15일에는 청진까지 남하했다. 일본의 항복 선언 직후 며칠간 휴식을 취한 소련군은 8월 21일부터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활동을 재개했다. 소련군은 북한 지역을 점령함에 있어서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거나, 소련군 사령부가 위치할 평양부터 점령한 후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는 순서를 택하지 않고, 북한의 최남단에 해당하는 38선 지역부터 먼저 점령한 다음 그 이북지역을 점령하는 순서를 택했다. 소련군은 8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서해안에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38선에 연접한 북한지역의 교통요지를 모두 점령했다.<sup>49)</sup> 38선 지역을 점령한 소련군은 곧장 38선 이남 지역과 이북 지역간의 인적 왕래, 물적 교류, 통신을 모두 차단했다. 소련군은 24일과 25일 38선 이남과 이북을 연결하는 철도들(경원선과 경의선)을 차단했고, 38선 지역에 경비부대를 배치하여 도로 통행을 통제했으며, 9월 6일에는 38선 이남 지역과의 전화 전보 통신을 완전 차단하고 우편물의 교환을 금지했다.<sup>50)</sup> 이와 같은 소련군의 38선 봉쇄조치는 소련이 38선을 국경선, 그것도 적대국간의 국경선처럼 만들려는 생각을 가졌음을 시사한다.

소련군의 이와 같은 38선 봉쇄와 관련하여 2가지 특기할 사항이 있다. 그 하나는 소련군의 그러한 조치가 미군이 아직 남한에 진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취해진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군이 유독 한반도에서만 분할 점령 경계선을 봉쇄했다는 점이다. 미군은 소련군이 38선을 봉쇄하고 난 지 3주 후인 9월 9일 서울을 점령했고, 미군이 38선 지역(개성)에 최초로 당도한 것은 그보다 이틀 후인 9월 11일이었다. 소련은 2차대전 종전 무렵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3개국을 미국과 분할 점령했는데, 그 3개 국가 중 독일에서는 점령 초기에는 점령 경계선을 봉쇄하지 않다가 뒤에 가서 봉쇄했고(그나마 봉쇄의 정도는 한국에서의 그것에 비해 크게 온건한 것이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955년 소련군이 철수할 때까지 점령 경계선을 봉쇄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한국에서만 점령과 동시에 점령

49) 소련군의 북한지역 점령양상은 森田芳夫, 『朝鮮終戰の 記録』(東京: 嶽南堂書店, 1964), 158~191쪽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50) 高峻石, 『南朝鮮勞動黨史』(東京: 勤草書房, 1978), 5쪽, U. S. Army,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HUSAFIG)*, part II, chapter IV, p. 44; 김광운, 『북한정치사 연구』 I (선인, 2003), 54쪽. 김광운의 저서 54쪽의 주 36에서 인용된 소련군 문서 「북조선의 철도운송 사업에 관한 정보」(1945. 9. 22. 조토포 중좌 작성: 소련국방성문서보존소, 주북한소련민정국, 목록 433847, 문서철 1, 72쪽)는 소련군이 경의선과 경원선을 차단한 날자를 8월 27일로 적고 있다.

경계선을 봉쇄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한반도에서 자국의 점령지역을 미국의 점령지역으로부터 분단시키려는 소련의 의지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보다 더욱 강했음을 시사한다.

소련의 38선 봉쇄에 대해 미국은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 소련과의 협상을 거듭 시도했다. 미국정부는 1945년 10월 중순 남한에 대한 미군의 군정실시와 관련된 기본지시에서 남북한 두 지역의 통치 절차 및 정책의 일치(곧, 행정의 통일)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남한 주둔 미군과 북한 주둔 소련군 간의 접촉을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sup>51)</sup> 주한미군정사령관 하지는 38선 봉쇄와 남북한 지역의 차별적 행정이 장차 한반도 통일정부수립에 큰 지장을 줄 것임을 우려하여, 38선 봉쇄 해제와 남북한의 행정통일을 기하기 위해 평양으로 연락장교단을 파견하여 소련군 지휘부와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고, 서울 주재 소련영사를 통해 북한주둔 사령관 치스챠코프에게 서울로 와서 지역적 분할로 인해 초래된 여러 가지 정치적 및 경제적 문제들을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치스챠코프는 하지가 파견한 연락장교단을 접견하지도 않았고, 서울 주재 소련영사 편에 보낸 서한을 통해 남한주둔 미군사령관의 협상제의에 응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sup>52)</sup>

소련군은 시간이 갈수록 38선의 통제를 더욱 강화했으며, 1945년 12월 중순에 이르면 38선은 마치 남북한간의 장벽처럼 되었다.<sup>53)</sup> 미국은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남북한주둔 미·소군 간의 예비 회담에서 38선 장벽의 완화·철폐와 교통수단 및 공공시설과 같은 중요한 시설들을 단일 행정체계로 통합할 것을 제의했으나 소련은 그 제의를 거부했다.<sup>54)</sup> 미국은 그해 5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도 미소가 합의보기 어려운 통일임시정부 구성 문제에 관한 협상을 잠시 연기하고 한반도의 재통일에 장애가 되고 있는 38선 봉쇄 해제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으나 소련은 그 제의도 거부했다.<sup>55)</sup> 38선 봉쇄를 해제하고 남북한 지역의 행정통일을 기하기 위한 협상을

51) *FRUS*, 1945, Vol. VI, p. 1075.

52) Berger, Carl, *The Korean Knot: A Military and Political History*(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1957), p. 56<Cho, Soon Sung, *op. cit.*, p. 94에서 재인용>; *FRUS*, 1945, Vol. VI, pp. 1051, 1055, 1071, 1072.

53) *HUSAFIG*, part II, chapter IV, p. 21.

54) *FRUS*, 1946, Vol. VIII, p. 634.

완강히 거부하는 소련의 태도는 소련이 북한지역을 장기 점령하려 하고 있으며, 장차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경제·정치 단위로 취급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반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미국 관리들에 의해 해석되었다.<sup>56)</sup>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한반도의 분단의 단초는 바로 소련에 의한 38선 봉쇄이다. 어떤 경계선을 기준으로 토착주민의 통상 통행 통신을 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곧 그들의 영토가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토의 물리적 분리는 필연적으로 장차 한반도가 한국인의 주권적 정치단위에 의해 분할 지배될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세계역사상 영토의 물리적 분리가 취해진 국가가 일시적으로라도 분단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소련군은 이처럼 38선을 봉쇄한 후 북한지역에 대해 남한지역에서의 미군의 통치와는 질적으로 상이한 통치를 실시하였다. 소련군은 각 도와 시·군 단위 및 대규모 공장이나 산업시설에 군경무사령부(위수사령부)를 설치해놓고, 소련군에 동조하는 한국인들의 자생 치안조직과 협조하여 북한 전역을 무력으로 통제하고, 소련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치안사범’으로 규정하여 탄압했다.<sup>57)</sup> 소련군은 언론 출판 결사 등의 자유를 부정했다.<sup>58)</sup> 소련군의 민정장교들과 요원들은 장차 북한의 사회주의화를 추진하고 사회주의정권의 책임을 맡을 북한지역의 독자적 공산당(박현영이 지도하는 서울 중심의 조선공산당과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북한 지역만의 공산당)을 조직하였고, 각급 인민위원회를 사회주의정권 수립에 부합하도록 조직·개편하였으며, 각급 인민위원회의 고문을 맡아 인민위원회의 행정을 지휘했다. 북한지역의 인민위원회는 소련군의 민정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했다.<sup>59)</sup>

북한의 각 지역을 점령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거나 기존 단체들을 인민위원회 혹은 인민정치위원회로 개편했던 소련군은 곧 이어 그 위원회로부터 ‘친일적 요소’를 숙청하는 작업을 전개했다.<sup>60)</sup> 친일적 요소의 숙청은 진정한 친일분자들을 숙청하는 것에 더하여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인사들(주로

55) *Ibid.*, p. 666.

56) *Ibid.*, p. 636.

57) 김광운, 앞의 책, 71쪽.

58) 오영진, 『하나의 중언: 작가의 수기』(중앙문화사, 1952), 131~142쪽.

59) 위의 책, 124쪽.

60) 김광운, 앞의 책, 86~87쪽.

일제하 국내에서 활동했던 민족주의적 인사들)의 제거나 인민위 참여를 제한하는 것까지를 포함했다. 그 결과 인민위원회는 소련군과 공산당에 더욱 더 순종적인 행정기구로 되었다.<sup>61)</sup>

소련군은 각 인민위원회 별로 그러한 준비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 북한 지역의 중앙행정기관 즉 부르주아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1945년 11월 19일 5도 인민위원회연합회를 개최하여 북조선 5도 행정10국을 설립했다. 소련군은 그러한 조직사업에 뒤이어 공산당과 인민위원회에서 북한의 사회주의화를 위해 일할 ‘민족간부’들을 양성했다. 그것을 위해 평양노동정치학교를 만들어 1945년 1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한 그해 11월부터 군간부 양성학교인 평양학원의 설립을 추진했다.<sup>62)</sup> 이러한 노력들에 의해 소련군은 북한의 사회주의화를 추진할 토착민의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조직적·인적 토대를 구축했다. 이러한 토대가 마련되고 난 후 소련군은 인민위원들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그들이 북한의 사회주의화에 나서도록 유도했다.<sup>63)</sup>

소련군이 이처럼 38선을 봉쇄한데 더하여 38선 이북지역에서 이질적 통치를 실시한 것은 장차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분리 통치될 조건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는 이미 분단과정으로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진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련군은 한반도를 불가역적인 분단과정으로 밀어 넣은데 이어 한반도의 분단

61)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문헌은 “지방정권기관[필자주: 각급 인민위원회를 지칭]들에 반동분자들이 잡입하여 해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원칙적 투쟁과정에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대표들이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술했다. 또한 소련의 문헌은 “[당시의] 인민위원회가 프롤레타리아와 근로 농민들의 혁명 민주주의 독재기관이었다”고 기술했다. 김한길, 앞의 책, 225쪽; B.V. 시체첸, 「해방후 조선에서」,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조선의 해방』(국토통일원, 1987), 316쪽.

62) 박명립, 앞의 책, 120쪽; B.V. 시체첸, 앞의 글, 327쪽, 김광운, 앞의 책, 142쪽.

63) 이와 관련하여 당시 북한주둔 소련군의 최고위 정치장교였던 리베테프(레베제프로 표기되기도 함)는 그의 회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사회주의와 소련체제에 관한 소련군전사들의 이야기는 인민위원회의 권위와 인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조선에 자주와 자본가가 없는 국가 즉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려는 의욕을 갖도록 고취시켰으며 그들의 정책에 유익한 영향을 주었다.” “[소련군장교들이] 매일 군인민위원회의 일군들과 지방주민들과 만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얻은 경험을 나누어주고 소련사람들의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 해주었다.” 리베테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자각하여」,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앞의 책, 119, 126~127쪽.

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들이 섬령한 북한지역에서 토착민의 주권적 통치기구를 설립하고, 그 통치기구를 앞세워 이전의 상황과 전혀 다른(따라서 남한의 상황과도 전혀 다른) 사회상황을 조성하는 변혁조치를 취한 것이다. 소련은 1946년 2월 8일 북한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회주의화를 지향하는 단독정권을 조직하고, 곧 이어 북한의 사회주의화를 위한 변혁('민주개혁')을 추진했다.

IV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갑자기 설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스스로를 '정부'나 '정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sup>64)</sup> 북조선공산당은 임시인민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정부'라고 표현할 경우, 북한에 단독정부를 설립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므로 '정부'라는 표현을 삼가고 '중앙행정주권기관'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법령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중앙행정주권기관의 학술적 명칭은 '정부'밖에 없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지역의 임시정부라는 점은 그것을 주도한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인정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구성을 사후 추인하기 위해 개최된 북조선공산당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된 「당의 정치노선 및 당사업 총결과 결정」은 임시인민위원회를 '우리 당이 영도하는 정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sup>65)</sup> 또한 당시 북한의 좌익단체들은 임시인민위원회를 '우리의 정부', '인민의 정권'이라고 선전했다.<sup>66)</sup> 끝날 북한의 공식 역사책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라고 규정했다.<sup>67)</sup>

북한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한국인의 정부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분단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인 토착민에 의한 주권적 정치단위 구성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38선 봉쇄와 소련군에 의한 이질적 통치에 추가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북한지역에서 분단의 핵심사항(토착민의 주권적 정치단

64) 1946년 3월 6일 임시인민위원회가 채택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를 겸하고 있는 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에 있어서의 중앙행정주권기관으로서 북조선의 인민·사회단체·국가기관이 실행할 임시법령을 제정, 발포할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광운, 앞의 책, 159쪽.

65) 김광운, 앞의 책, 157쪽.

66) 박명립, 앞의 책, 153~154쪽; 서동만, 앞의 책, 156쪽.

67) 김한길, 앞의 책, 228쪽.

위 구성과 영토의 분할지배)이 모두 실현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설립으로 한반도의 분단은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지역에서는 임시인민위의 설립에 뒤이어 북한 지역을 사회주의사회로 이행시키는 혁명조치들('민주개혁')이 취해짐으로써 분단의 불가역성이 더욱 공고해졌다. 임시인민위 설립 직후 북한에서 발행된 임시인민위 찬양 선전물들은 “먼저 북조선에 철저한 민주정치를 세움으로써 전국의 모범이 되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성립은 전국의 통일적 임시정부의 수립을 촉성하는 것” 등의 구호를 선전했다.<sup>68)</sup> 훗날 북한의 공식 역사책은 “하루 빨리 북조선에 중앙주권기관을 세워야만 북조선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지체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으며 혁명적 민주기지를 창설하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을 주동적으로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었다”고 기술하면서 임시인민위원회 설립의 기본목적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며 북반부에 혁명적 민주기지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sup>69)</sup>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설명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북한에서 신속하게 사회주의를 실천한 다음 그렇게 변화된 북한을 기지로 삼아 남한까지 사회주의체제를 확대하는 것이 된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그러했기 때문에 임시인민위는 설립되자마자 북한을 ‘민주화’(곧, 사회주의화)하기 위한 ‘민주개혁’에 착수했다. 임시인민위는 3월 하순 ‘20개조 정강’을 발표했다. 민주개혁의 종합계획인 ‘20개조 정강’은 북한 사회주의화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중요 혁명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개혁, 반동분자와 반민주주의자 제거, 학생과 성인을 상대로 한 사회주의사상 주입교육 등이었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업은 토지개혁이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민주개혁의 제1의적 사업으로 토지개혁을 추진했다. 토지개혁은 ‘20개 정강’이 발표되기도 전인 3월 10일경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각 농촌에 거주하는 빈농과 고농들이 농촌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농촌위원회가 그 지역의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직접

68) 박명립, 앞의 책, 154쪽.

69) 김한길, 앞의 책, 226쪽과 228쪽.

강탈한 후 지주들을 그 지역에서 추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러한 토지개혁은 급속하게 전개되어 북한 전역에서 약 20일 만에 완료되었다.<sup>70)</sup>

이러한 북한에서의 변화는 격렬한 유혈투쟁이 없는 한 환원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으며, 북한의 사회상황을 남한의 사회상황과 이질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로 인해 한반도는 남한지역이 사회주의화되거나 북한지역이 ‘민주개혁’ 이전 상태로 환원되지 않는 한 통일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남한의 사회주의화나 북한의 ‘민주개혁’이전 상태로의 환원은 모두 유혈을 수반하는 격렬한 투쟁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남한에서 그런 투쟁이 일어나는 것은 미국이 방치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에서 그런 투쟁이 일어나는 것은 소련이 방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민주개혁’은 한반도 분단을 공고히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38선 봉쇄→북한지역에서의 이질적 통치→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수립→북한지역의 사회주의지향 개혁으로 이어지는 소련의 조치가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이었다고 판정할 수 있다.

소련의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진 이후 한반도 분단을 위해 남은 것은 그것의 제도적 완결뿐이었다. 한반도 분단의 제도적 완결이란, 인간의 사망에 관한 법의학적 표현을 빌리면 사망의 최종 증상(호흡정지나 심장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분단에 대응하는 조치들이 남한에서 취해져 남북한에 두 개의 국가 건국이 공식화되는 것을 말한다. 1948년 8월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9월 북한에서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국된 것은 한반도 분단이 제도적으로 완결된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민주개혁’ 이후 한반도와 관련하여 전개되었던 모든 정치적 사건들은 한반도 분단의 제도적 완결에 이르는 기제였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1948년 남북한에서 두개의 정부가 수립된 것을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북한에서 ‘민주개혁’이 실천 된 이후에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했던 정치적 사건들(좌우합작운동의 실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한국문제의 유엔이관, 남북협상의 실패 등)을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법의학적 표현을 빌리면, 전자는 사망의 증상을 사망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고, 후자는 사망의 기제를 사망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오류를

---

70) 김한길, 앞의 책, 233쪽; 김광운, 앞의 책, 285~289쪽.

범한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만길, 『한국민족운동사론』. 서울: 한길사, 1985.
- 강만길,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5.
-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조선의 해방』. 서울: 국토통일원, 1987.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 1945~1980』. 서울: 국토통일원, 1987.
-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김광운, 『북한정치사 연구 I』. 서울: 선인, 2003.
- 김창순, 『북한15년사』. 서울: 지문각, 1961.
-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 서울: 박영사, 1989.
- 민주주의민족전선(편), 『조선해방연보』. 서울: 문우인서관, 1946.
- 박갑동, 『박현영: 그 일대기를 통한 현대사의 재조명』. 서울: 인간사, 1983.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서울: 나남출판, 2003.
- 박태균, 『한국전쟁』. 서울: 책과 함께, 2005.
-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 서울: 행림출판사, 1979.
- 송남현, 『해방3년사 II』. 서울: 까치, 1985.
- 신용하, 「열강의 한국 남북분단 및 신탁통치 정책과 백범 김구의 노선(1943~45)」.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광복직후의 건국운동과 백범 김구』. 백범기념관 개관 2주년기념 학술회의 보문집), 2004, 7~43쪽.
- 양동안, 「남북한정부수립과정 비교」. 구범모(외), 『정치적 정통성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123~213쪽.
- 양동안, 「『건준』과 『인공』의 결성 및 해체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제3집, 1993, 263~342쪽.
- 양동안, 『대한민국건국사: 해방3년의 정치사』. 서울: 현음사, 2001.
- 양동안, 「여운형의 민족통일노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신문화연구』 27권 4호, 2004, 141~174쪽.
- 양동안, 「1948년 남북협상의 허와 실」. 『한국사 시민강좌』 38집, 2006, 143~165쪽.

양동안, 「한반도 분단과정과 통합리더십의 결여」, 이서행(외),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한 정치리더십』.

서울: 백산서당, 2007, 29~136쪽.

오영진, 『하나의 증언: 작가의 수기』. 서울: 중앙문화사, 1952.

윤중진, 『법의학』. 서울: 고려의학, 2006.

윤진현, 『한반도분단사의 재조명』. 서울: 문우사, 1993.

이완범, 『삼팔선 획정의 진실』. 서울: 지식산업사, 2001.

이완범, 「한반도 분단의 성격: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 분단」. 김계동(등),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서울: 명인문화사, 2007, 23~73쪽.

이영근, 「통일일보 회장 고 이영근 회고록(하)」, 『월간 조선』 1990년 9월호, 430~442쪽.

이윤성, 『법의학의 세계』. 서울: 살림, 2003.

이정식, 『김규식의 생애』. 서울: 신구문화사, 1974.

전득주, 『세계의 분단사례 비교연구』. 서울: 푸른길, 2004.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이 형성』. 파주: 돌베개, 2006.

정영훈, 「한반도 분단의 민족내적 원인」. 『정신문화연구』 21권 2호, 1998, 131~160쪽.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1992.

중앙일보 현대사연구팀, 『발굴자료로 쓴 한국현대사』. 서울: 중앙일보사, 1996.

차기벽, 『민족주의원론』. 서울: 한길사, 1990.

차상철, 『해방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 서울: 지식산업사,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설 한민족문화연구소(편),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서울: 선인, 200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조선공산당문건자료집(1945~46)』. 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3.

김한길, 『현대조선력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김희일, 『미제 식민지통치하의 남조선이 걸어온 예속과 몰락의 30년』. 평양: 조국통일사, 1976.

高峻石, 『南朝鮮勞動黨史』. 東京: 勁草書房, 1978.

森田芳夫, 『朝鮮終戰の 記録』. 東京: 巖南堂書店, 1964.

藤城和美, 『朝鮮分割: 日本とアメリカ』. 京都: 法律文化社, 1992.

RG 165, ABC 387 Japan, Sec. 4A, Box 506

Barker, Elisabeth, *Austria 1918-1972*. Coral Gables, FL: Univ. of Miami Press, 1973.

Cho, Soon Sung,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 An Evalua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67.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81.

Henderson, Gregory, Lebow, Richard N. and Stoessinger, John G., *Divided Nations in a Divided World*.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Inc., 1974.

Lankov, Andrei, "The Soviet Politburo Decisions and Emergence of the North Korean State, 1946-1948."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From Division Toward Peaceful Unification*, The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Politics, 13-15 July 2005, pp. 62~80.

Matray, James I.,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1985.

Stearman, William Lloyd, *The Soviet Union and the Occupation of Austria*. Bonn: Siegler & Co. Kg., 1956.

U.S. Army,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HUSAFIG) 1~4*. 서울: 돌베개, 1988.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45*. Vol. VI; 1946, Vol. VIII,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1971.

### 국 문 요 약

한반도의 분단은 한반도에서 한국인에 의해 구성된 두 개의 주권적 정치 단위가 등장하여 한반도를 분할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한반도 분단의 원인 이란 남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주권적 정치단위가 설립되는 것이나 한반도가 두 개의 주권적 정치단위의 배타적 영토로 분리되는 것을 초래하는데 필연적이고 우선적인 작용을 한 요인을 말한다.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 한반도 분단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요인들은 한반도에서 복수의 주권적 정치단위의 등장이나 한반도를 복수의 영토로 분리하는 것을 초래하는데 필연적·우선적 작용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라고 말했던 것들은 실제에 있어서는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아니었다. 한반도 분단의 초래에 필연적·우선적 작용을 한 요인은 1945년 8월부터 1946년 가을까지의 약 1년 동안 소련이 북한에서

취한 38선 봉쇄, 남한에 대한 미국의 통치와 이질적인 통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설립, 사회주의 지향적인 변혁 실시 등과 같은 조치들이다. 소련의 그 러한 조치들이 한반도 분단의 정확한 원인이었다.

● 투고일 : 2007. 10. 20.

● 심사완료일 : 2007. 11. 28.

● 주제어(keyword) : 분단(division), 원인(cause), 38선 봉쇄(the blockade of 38 parallel),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설립(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